## 국민 절반 "윤 정부, 5·18 우선 과제는 진상조사·진실 알리기"

10명 중 7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 "5·18. 한국 민주화에 기여했다" 76.5% 답해

#### 5·18기념재단 '5·18 인식 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 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장 우선해 추진할 일은 '5·18 진상조사와 진실 알리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 지만 임기 내 완수하지 못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헌 법 수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5.18기념재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5·18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5명 (45.9%)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느냐.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달 라'는 물음에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를 우선 지 목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상 및 치유' (22.2%), '5·18정신 세계화' (14.5%), '5·18기념 사업 및 기념시설 조성' (9.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에선 '진상조사 및 진 실알리기'를 우선 지목해 응답한 비율(54.3%)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에선 41.2%가 진상조사 및 진 실알리기를 꼽았다.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 다고 보느냐'는 질문의 경우 '필요' (매우 필요하다 39.9% + 필요하다 29.2%)라고 답한 비율이 6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 (12.8%), '필요하지 않다' (15.5%)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8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에서 46.9%로 가장 저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5% + 대체 로 그렇다 20.0%)고 응답한 비율이 76.5%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율은 각각 12.5%, 8.1%에 그쳤다.

'(5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는 5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 로 '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음 26.9% + 대체로 알고 있음 30.8%)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 '보통' (14.2%), '비인지' (28.0%)였다.

5·18민주화운동 이미지와 관련해 '5·18은 국가 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물 음에는 79.8%가 동의했다. '매우 그렇다' 64.8%, '대체로 그렇다' 14.9%였고, '보통이다' (8.8%), '그렇지 않다' (8.9%)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88.7%였다. 젊은 연령층인 '20대'(3.3%)와 '30대' (4.2%)에서 5·18 인지도가 다소 감소한 반 면, '대구·경북' (2.8%)과 '강원·제주' (3.2%)에서 는 5·18 인지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18재단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전 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4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기 반의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커즈 월드컵 인 광주 개막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선포식'이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국적의 프로젝트 음악 그룹이 식전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해남 ESS 화재 원인 '배터리 이상' 추정

3차 화재원인 조사 결과

ESS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해남에서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는 배터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3차

조사는 현장 조사, 발화 배터리 분석, 자료조사, 실증실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2020년 5월 27일 해남에서 발생한 태 양광 발전소 화재 원인을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 정했다. 조사단은 특히 고충전율 사용이 화재발생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SDI의 배터리가 사용된 이 ESS의 당시 배 터리 충전율은 95%로, '옥외 90% 이하' 기준을 초 과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또 단층촬영(CT)을 통해 발화된 배터 리 셀 내부의 구리 집전체 용융 형상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가 화재를 인지하 고 소화하려고 했지만 화재가 확산됐다는 점을 지목 하며 삼성SDI 배터리 내장 소화설비의 신뢰성에 대 한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수족관 고래 바다로 보내자"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3마리 중 2마리 폐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 전국 22마리 방생 주장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수족관에 있는 흰고 래(벨루가·사진)를 바다로 돌려 보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어린이날을 앞 두고 3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 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여수 한화 아쿠 아플라넷의 벨루가 한마리를 비롯해 전국 6곳 의 수족관에 모두 22마리의 고래가 갇혀있다. 종류별로는 큰돌고래 16마리, 흰고래(벨루 가) 5마리, 남방큰돌고래 1마리 등이다.

야생에서 고래는 수심 700m 아래까지 잠수 하기도 하는데 가족 단위로 헤엄쳐 다니는 무 리생활을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능지수(IQ)가 60~70 정 도에 달할 정도로 영리한 고래를 가두어 둔 콘 크리트 수조는 그동안 고래의 무덤이었다고 주 장한다. 실제로 최근 13년 동안 전국 8곳 수족 관에서 46마리가 폐사했고, 한해 빼고 매년 2~ 6마리씩 죽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5마리씩 폐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벨루가가 1마리씩 폐사해 현재 1마리만 살아있다.

1000t 규모의 여수 한화 아쿠라플라넷 수조 에서 생활하는 벨루가는 성체가 4m 이상 자라 돌고래가 아닌 고래로 분류된다. 순백의 아름 다운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친화적인 성격과 엔젤링(원형 물방울 고리) 묘기 등으로 이미 해외에서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2년 동안의 코로나 방역과 재택수



업, 마스크 쓰기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돼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동안 어린이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 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이 이 시기에 고래 방생을 주장 하는 것도 수족관의 고래를 관람하는 것은 죽 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슬픈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 차원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래를 수족관에 전시하고 쇼에 동원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서울 대공원에서 '제돌이'를 비롯한 7마리의 남방큰 돌고래를 제주바다로 돌려보낸 것처럼 모든 돌 고래와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또한 "살아있는 고래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 하고 수족관 전시를 금지한 국가는 10개국에 달하는 등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및 공연 금지 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세 계적인 흐름에 맞춰 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금 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KWANGJUILBO LEADERS ACADEMY** 지역의 미래, 호남의 리더 まりかり 付えをなりりかりないひり かんないひん 2020. 6. 9.(화) UN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 8기 원우회 일동 -2020 KWANGJUILBO 2020. 5. 19. URBAN 호남 언론 최초로 개설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계 석학과 유명강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 장소\_ 함평 엘리체 CC 수준 높은 고품격 프로그램입니다.

### 31보병사단, 부정군수품 유통 집중 단속

육군 제31보병사단은 5월 한달동안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 테러 등 다 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 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 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 용유류 등이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군용총기・탄

약・폭발물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처할 수 있고, 기타 군복 및 군용 장구류나 기 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 상에 포함된다. 부정군수품 거래・유통 신고는 광주 ·전남 단속 위원회(062-260-6071)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